

전태일 열사 정신계승 2023 전국노동자대회 120만 전태일의 반격, 퇴진광장을 열자 | 교육지

2023년 10월 27일 | 민주노총 교육원 | www.nodong.org | 02-2670-9100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윤망진창, 19세기로 돌아가는 대한민국

윤석열 정부 + 영망진창, 윤망진창. 검찰독재, 지인정치, MB 아바타 인선, 친재벌 정치, 종미(從美)친일, 이념정치, 삼권분립 무시, 노동탄압, 언론탄압, 공공기관 민영화... 불과 1년 6개월여 만에 윤석열 정부에 붙은 수식어들이다. 나라 전체가 영망진창이 되어가고 있다. 영망진창은 △일이나 사물이 형클어져서 갈피를 잡을 수 없을 만큼 결단이 나거나 어수선한 상태 △말이 아닐 정도로 수준이 뒤떨어져 한심한 상태 △술 따위에 흠뻑 취하여 제정신을 잃은 상태라는 뜻(국립국어원)이다. 윤석열 정부를 정확하고 확실하게 표현한다. 수많은 '윤망진창' 중 몇 가지만 살펴보자.

멈춰버린 시간,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

곧 이태원 참사 1주기이다. 희생자들 얼굴과 이름이 놓인 분향소에 발길조차 하지 않았던 윤석열 대통령. 명패와 영정 없는 분향소에는 몇 번이나 했던 조문이 얼마나 기만적이었나를 보여준다. 권력과 정치는 159명의 죽음이라는 참사에 1년간 손을 놓고 있었다. 진상규명은 아득하고 책임자 처벌은 요원하다. 유가족의 뜻이 담긴 이태원 특별법 제정해 가려진 진실을 드러내고 반드시 진상

을 규명해야 한다.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 협의회와 10·29 이태원참사 시민대책회의는 지난 18일 참사 1주기 기자회견을 갖고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을 제정하여 진실을 함께 찾아가는 것이 진정한 애도"라고 밝혔다. 성역 없이 참사의 진상과 책임을 명확하게 규명하고,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하는 것이며, 또 다른 사회적 참사를 막는 길임을 윤석열 정부는 외면하고 있다.



사실상 집회 허가제의 민주주의·헌법 파괴

노동자, 민중의 투쟁으로 진일보한 민주주의도 빠르게 과거로 돌아가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시행령 정치로 헌법이 보장한 '집회·결사의 자유(헌법 제21조)'를 제한하는 중이다. 관련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관할경찰관서장 재량권을 활용해 민주노총 집회를 금지하거나 편의대로 강제해산을 집행하고 있다. 그 결과 집회 규모를 무시한 차선 제한, 평일 17시 이후 집회 불허, 야간문화제 금지 등 집회·결사의 자유를 옥죄고 있다.

국회 고유의 권한인 입법권을 무력화하기 위해 거부권도 남발한다. 쌀값 폭락 시 농가 소득을 보장하는 양곡법, 권력의 언론 장악 방지를 담은 방송법, 간호사의 처우개선 내용을 다룬 간호법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노조법 2조3조 개정안 역시 거부권을 예고한 바 있다.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법 2조3조 개정안은 △원청의 사용자성 범위 확대 △쟁의 행위 범위 확대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노동 탄압 수단으로 활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시민사회

단체가 지난 20여년을 요구해 온 법안이다. 더불어민주당은 11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개정안 통과를 밝혔지



▲ 2022년 지난 해 12월, 국방과학연구소를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은 '압도적으로 우월한 전쟁 준비'가 평화라고 말했다.©MBC

만, 법 통과와 결림돌이 바로 국민의힘 반대와 윤석열의 거부권 행사이다.

한반도 전쟁 위기를 높이는 반공 정치

10월 26일,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에 대규모 지상전 예고했다. 같은 달 7일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습으로 중동의 화약고였던 가자지구는 이제 전쟁 지역이다. 보도에 따르면 팔레스타인 사망자 6546명(25일, 가자지구보건부) 중 2704명(41%)이 어린이다. 보호 대상인 어린 생명마저 죽음으로 내모는 것이 전쟁이다.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는 팔레스타인에 강경정책으로 일관하며 '힘에 의한 평화'를 내세웠다. 결과는 두 나라의 민간인 피해다.

윤석열도 '힘에 의한 평화'를 외친다. 취임 1년 만에 무기 수입에 18조 원(문재인 정부 5년의 7배)을 썼다. 모두 미국산이다. 북한과도 대화를 통한 평화 구축보다는 '선제 타격' '우리도 핵무기 보유' 등 힘 자랑을 우선한다. 대규모 한미 연합 군사 연습과 상륙 훈련도 재개했다. 4월에는 한미일 해상 훈련을, 10월에는 한미일 첫 연합 공중훈련을 가졌다. 윤석열 정부가 내세운 '힘에 의한 평화'에 북

한도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근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순항미사일 발사 등 무력

대응으로 맞섰다. 언론 보도가 되지 않을 뿐 2023년 들어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매일 이어지고 있다. 유일한 분단국가 한반도에 전쟁 위기 고조는 상상이 아니라 현실이다. 여기에 때아닌 반공주의 이념정치까지 내세워 시대를 역행하고 있다. 독립운동을 지우고 친일을 포장해 뉴라이트 사관을 전면화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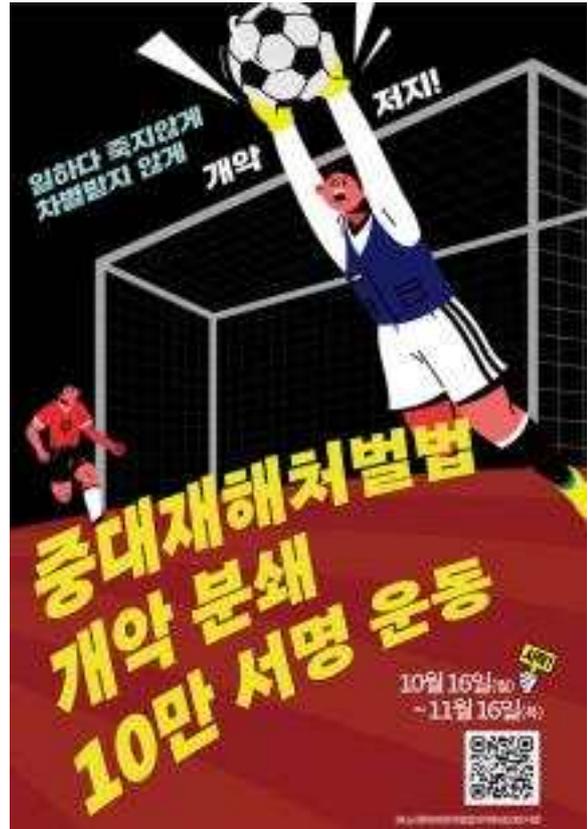
민주노총 탄압해야 윤석열이 산다?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윤석열은 노동을 폄하했다. 손발 노동, 120시간 노동, 산재사망 노동자 모욕 등 노동은 부정적이고 나쁘다는 인식을 드러냈다. 대통령이 되어서는 친기업 반노동 기조를 구축하고 노동조합 탄압에 매진하고 있다. **윤석열의 노동 배제 원칙은 확실하다.** 2022년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들의 파업을 산업현장의 불법 상황으로 간주하고 직접 공권력 투입 가능성을 시사했다. 다단계 하청구조에서 저임금과 고용불안에 시달렸던 하청노동자들의 “이대로 살 순 없지 않습니까?”라는 외침을 짓밟았다.

이후 △화물연대 파업에 업무명령 개시 △건설노조 탄압(압수수색 20여회, 조합원 1700명 소환조사, 35명 구속) △주 69시간 노동 발표(주7일 최대 80.5시간) △최악의 최저임금 인상 △단체협약 시정명령을 통한 노동조건 후퇴 △노조 사무실 사용기준 변경 △세액공제와 시행령 정치를 무기로 한 노조 회계 공시 압박 △국민연금·건강보험·실업급여 등 사회안전망 무력화 △철도 민영화 등 빠른 속도로 노동자 투쟁의 성과를 뒤로, 뒤로 물리고 있다.

한편, 보건복지부 주관 정부위원회는 민주

노총과 한국노총을 배제하고 소규모의 전국 노총(4638명)과 새로고침협의회(약6000명)를 참여시켰다. 조합원 245만여 명의 양대노총 대표성을 무시하고 정부 입맛대로 정책을 좌지우지하겠다는 뜻이다.



▲ 민주노총과 생명안전 후퇴 중대재해처벌법 개악저지 공동행동은 11월16일까지 중대재해처벌법 개악을 반대하는 10만 서명운동을 진행한다.

중대재해처벌법 개악으로 생명안전도 위협

예정대로라면 2024년은 50인(억)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다. 그런데 상황이 바뀌었다. 국민의힘 임이자 국회의원 50인(억) 미만 기업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를 2년 연장하는 원포인트 법안 발의로 법 개악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다. 지난 8월 윤석열 대통령이 ‘킬러 규제를 없애라’ 주문한 뒤 급속한 역행을 예고했던 노동자 생명안전제도가 위협하다.

가장 많은 산재사망이 발생하는 곳이 50인(억) 미만 사업장이다. 정부와 국회가 중대재해의 80%를 차지하는 참담한 현실을 계속 외면하겠다고 한다. 준비 부족은 이유가 될 수 없다. 앞서 말한 수많은 노동탄압은 정부 주도 아래 신속하고도 일사천리로 추진되었다. 노동부가 법 개악에 골몰하는 대신 법이 현장에서 적기에 제대로 작동하도록 점검하고 지원하는 역할에 충실했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특히 우려스러운 점은 **50인(억) 미만 사업장 적용 시기 연장이 윤석열 정부의 중대재해처벌법 사문화 전락과 맞물렸다**는 것이다. 검찰은 DL이엔씨(옛 대림, 7건), 롯데건설(5건), 현대건설(5건), 철도공사(4건), 세아베스틸(3건) 등 연속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업을 기소조차 하지 않음으로써 대기업에 '버티면 봐준다'라는 신호를 보냈다. 노동자, 노동조합 탄압에는 압수 수색과 구속수사를 남발했던 검찰과 매우 상반되는 태도이다.

9월 말 기준, 400건의 중대재해 중 노동부의 기소 의견 송치는 83건, 검찰 기소는 겨우 25건뿐이다. 불기소한 5건은 이유조차 공개하지 않았다. 윤석열 정부의 노동자 생명 안전 경시 태도를 뒷받침하는 수치이다. 대기업은 검찰이 봐주고 중소기업은 적용 시기 연장으로 봐주면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긴장하던 사업주의 재해예방 투자와 현장 개선도, 노조의 현장 참여도 멈출 수밖에 없다.

그리고, 10월 방영환 택시 노동자의 죽음

“택시 완전 월급제 실시하라!”
2023년 9월 26일 자기 몸을 스스로 불사른 택시 노동자 방영환 열사의 절규다. 전태일

열사 53주기 전국노동자대회를 불과 한 달여 앞두고다. 영원한 건설노동자 양희동 열사가 지난 5월 1일 노동절, 노동탄압 중단을 외치며 분신한 지 5개월여 만에 또 한 명의 노동자가, 동지가 우리 곁을 떠났다.

방영환 열사의 외침은 택시 노동자들의 숙원인 '택시 월급제 현장 정착, 불법과 갑질·노조탄압 책임자들 처벌'이었다. 2008년 택시 운전대를 잡은 방영환 열사는 노조결성과 노동조건 불이익 변경 거부로 해고(2020년 2월)되었다. 대법원의 부당해고 확정판결(2022년 10월)로 일하던 해성운수로 복직되었지만, 사측은 가만있지 않았다.

사납금제 근로계약서를 들이밀었다. 배차 불이익, 갑질, 집단폭력, 월 급여 1백만 원 지급 등으로 노동자 방영환을 짓밟았다. 심지어 올해 5월부터는 급여를 아예 지급하지 않았다. 완전 월급제 이행과 택시 노동자 생존권 보장을 요구해 왔던 택시 노동자 방영환은 이런 요구를 담은 1인 시위 227일 만인 9월 26일 오전, 해성운수 앞에서 분신했고, 10월 6일 운명한다.

택시 노동자와 사납금 제도

사납금, 회사에 바치는 돈(국립국어원)이다. 택시 사납금제는 오랜 시간 법인 택시 노동자를 괴롭혀 온 주범이었다. 정해진 사납금을 못 채우면 개인 돈으로 메꿔야 했기에 택시 노동자들의 장시간 노동과 난폭 운전을 유발했다. 노동자 투쟁으로 2019년 폐지되고 '전액 관리제'로 바뀌었다.

하지만 전액 관리제는 택시 노동자들이 요구해 온 '월급제'와 다르다. 전액 관리제 역시 택시 노동자가 '일한 만큼'의 급여를 보장하지 못한다.

택시 회사는 법의 허점을 이용해 더 많은 수익을 가져간다. 택시 노동자들이 '완전 월급제' 실시를 요구하는 배경이다.

11월 11일 노동자가 퇴진광장을 열자

지금 윤석열은 선출된 권력이라는 탈을 쓰고서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노동을 탄압하며 철저하게 재벌과 자본을 위해 국정을 운영한다. 종마·친일 외교로 스스로 세계에서 고립을 자초한다. 역사 전쟁으로 일본군 위안부, 강제 징용, 핵 오염수, 독도, 동해의 일본해 표기 문제 등을 덮는다. 해외 순방에는 578억이라는 역대급 예산을 편성하고 민생예산은 삭감한다. 각종 사회안전망 후퇴로 약하고 힘없는 서민의 허리는 더욱 조인다.

윤석열의 반노동, 노동 배제 이유는 뚜렷하다. 민주노총을 탄압해야 윤석열 정부의 독선과 반민주, 반민생, 반평화 정책을 유지

할 수 있기 때문이다. 1970년 평화시장의 재단사 전태일 노동자는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는 외침으로 산화해 노동운동의 불꽃이 되었다. 53년 뒤인 2023년 양회동 열사는 윤석열을 퇴진시키고 ‘노동자가 주인되는 세상을 꼭 만들어 달라’고 외쳤다.

민주노총은 2015년 11월 10만 민중총궐기로 박근혜 퇴진의 광장을 열어 2017년 탄핵이라는 역사의 바탕이 되었다. 2023년 11월 11일 민주노총 120만 노동자가 전태일이 되어 폭력적인 퇴행을 거듭하며 노동 민생 민주 평화를 파괴하는 윤석열 정권을 향한 반격에 나서자.

15만 전국노동자대회, 20만 민중총궐기로 윤석열 퇴진의 광장을 열자. **120만 전태일의 반격으로 퇴진광장을 열고 윤석열 퇴진 그날까지 노동자의 길을 가자. 투쟁!**



2023년 11월 11일 (토) 14시
노동 민생 민주 평화 파괴 윤석열 정권 퇴진! 전태일열사 정신계승 2023 전국노동자대회